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현황과 과제

임 을 출*

- I. 서론
- II.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 III.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 IV.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제화 노력을 통한 국제시장 접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한지 등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정치·사상적으로 여전히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전례 없는 유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흐름에 북한도 나름대로 대응하려는 자구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화의 심화는 북한과 남한에게 도전과 기회의 제공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다행히 북한은 세계화의 거센 물결 앞에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국제시장 접근 노력 등을 통해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국제화가 남북한의 협력을 심화시켜 평화공존과 번영의 틀로 활용할 여지를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각 주체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국제화나 국제시장 접근과 관련한 새로운 대북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EU나 국제구호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화 지원 및 개발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겨레21 북한전문기자·정치학 박사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의 국제화 노력을 통한 국제시장 접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한지 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정치·사상적으로 여전히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전례 없는 유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흐름에 북한도 나름대로 대응하려는 자구책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혁을 수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북한 변화의 특징은 ‘개혁 없는 변화’로 규정된다. 이 시기에도 북한은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며, 추호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¹⁾ 그러나 1990년대 북한 당국은 내부 체제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면서 묵인하는 식으로 개혁정책을 취해왔다. 사실 중국의 개혁과정

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중국 중앙당국이 아래로부터의 사실상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식으로 개혁이 심화되어온 셈이다.²⁾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기존의 점진적인 적응과 개선 차원이기는 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을 수반한 능동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2002년 7월에 이루어진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 조치)는 생산, 가격, 판매 등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시장기구에 의한 소비재의 분배 등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급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식·비공식 시장경제의 부상은 북한 내부의 사회·정치적 동향을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시장은 북한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래 복리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³⁾

일반적으로 ‘개혁’은 시장경제제도 자체의 도입이나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지칭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본 연구의 주제인 국제화는 시장경제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 무역기구(WTO) 질서 아래 지구촌 경제가

1) 노동신문, 1999. 5. 26.

2) Wing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8, 1994, 281~284쪽.

3) EU,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13쪽(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north_korea/csp/01_04_en.pdf).

통합되고 있는 시대에는 자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경제 교류가 필수적이다. 내부 축적 자원이 빈약한 북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7·1 조치 이후 외국기업과 합영·합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7·1 조치 시행을 전후로 한 북한의 국제화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시장 접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일본, EU 등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서구 자본주의 현장에 대한 시찰과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⁴⁾ 최근 평양에서는 북한의 시장지향경제(market-oriented economy) 이행 문제를 다루는 북한과 EU 사이의 대규모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다.⁵⁾ 개혁 혹은 시장경제의 진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개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대외개방은

대개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내의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방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존자원과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북한에 있어 대외경제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자급적 공업체계 건설을 추구해 왔으나, 원유를 포함한 공업용 원자재 및 생산설비는 구소련,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지원과 수입에 의존해 왔다.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만성적 부족현상과 기술낙후로 해외로부터의 산업기술 및 원자재 수입의 가능여부는 경제성장의 관건이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한 자급적 경제체제 건설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존자원과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의 제약요인으로 실질적인 대외경제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⁶⁾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 시장은 사라졌다. 사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이다. 북한은 동구상호원조회의(COMECON) 회원국은 아니지만,⁷⁾ 그동

4)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 2, 60쪽.

5) 기 르두 주한 EU 대표부 부대표 인터뷰 내용임. 연합뉴스, 2004. 9. 6.

6) 1949~84년 동안 북한이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 동맹국과 OECD 국가들로부터 받은 총 경제지원금은 47억 4,849만 달러에 달하며, 1946~87년 동안 대소련 무역적자 누적액은 30억 6,850만 달러,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액은 20억 8,22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음을 반증한다.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18~19쪽.

7) 여기서 북한이 COMECON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눈길을 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입을 강요했지만 김일성 주석은 “동구나라들의 생산력은 중학생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치원생 수준인데, 만일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유치원생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경제를 건설해서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그 나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끝내 가입하지 않았

안 우호무역 형태로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량 및 에너지를 도입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제무역시장의 부재(不在)는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시장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편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권내에서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 및 국제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프라의 확충,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국제화는 북한에게도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 다른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국제화는 전지구화를 필두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화이다. 국제화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의 경우 국제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경제 분야였다. 한국경제는 무역은 물론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외국의 기계·부품·원료·기술·디자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자본의 대외의존도도 높다. 정치에서도 분단이라는 숙명적 조건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연계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의 국제화 또한 쇄국의 울타리가 무너진 이래로 끊임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문과 예술 분야

는 물론이고 대중문화도 국제적 동질화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국제화는 기술 및 경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IT)의 혁명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치·경제·문화적 대외종속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이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들도 국제화 정책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의 대외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과 외국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력의 양성과 정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전 국민의 국제감각을 고취하고,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 교육 등을 포함한 국제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경제영역에서 국제시장 접근을 위해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북한의 국제화 실상과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어 그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해 본 뒤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다는 것이 김원삼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소장 겸 경제학회 회장의 설명이다. 한호석, “북(조선) 경제의 이해를 위하여”, 『북한정세 보고서』, 미주평화통일연구소, 뉴욕, 1995. 11, 2쪽.

II.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오늘날 북한의 대외관계를 특징짓는 용어는 ‘실리외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4년 5월 24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 본인 납치문제를 양보하고, 쌀 25만 톤과 의약품, 경제제재의 연기,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은 대표적인 실리외교 사례로 꼽힌다. 최근 북한 외교는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그간 고수해왔던 정치적 입장이나 명분은 과감히 양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기적 외화 벌이를 비롯해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합영·합작 투자 유치를 통해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들을 통한 개발협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도 무관치 않다.⁸⁾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영국, 호주, EU 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19개 나라와 새롭게 국교를 맺는 등 전세계 155개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41개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1. 대외 무역

북한은 자급적 공업체계 건설 정책의 결

과 산업특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비교우위의 개발에 실패했으며, 이는 곧 상품 수출 능력의 결여와 무역패탄의 낙후로 나타났다.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 이전 시기에 북한은 주로 구소련의 지원과 바터무역에 의존해 원자재와 설비를 확보했으며, 이들 국가의 체제변혁 이후에는 중국과의 지원성 교역과 바터형식의 변경무역에 의존해 주요 물자를 조달했다. 그러나 중국도 세계화 물결에 적극 합류해 WTO 가입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더 이상 북한과 지원성 교역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도 무역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 붕괴 이후 무역관계법의 정비,⁹⁾ 경제특구의 설치, 국제무역박람회·전시회의 참가, 상품 품질 제고 노력, 대외 상품선전활동의 강화 등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대외무역은 1994년 이래 최고치에 달해 ‘고난의 행군’시기(1995~2000)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는 북한이 대외무역의

8) 최수현 외무성 부상의 제11차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연설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 6. 23.

9) 외국인투자법(1992년 10월 제정→1999년 2월 개정), 합작법(1992년 10월 제정→1999년 2월 개정), 외국인기업법(1992년 10월 제정→1999년 2월 개정), 외화관리법(1993년 1월 제정→1999년 2월 개정), 가공무역법(2001년 4월 제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각각 2002년 11월 제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필요한 물자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평등·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 스스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외경제 중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자본주의 시장진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합병·합작, 차관 도입 등 다각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할 필요성도 생겼다. 따라서 내부준비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외경제 교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을 뚫고 나서는 문제가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됐다. 실리보장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경제건설을 이룩해 주는 것이 현 시기 자력갱생의 중요한 요구”¹¹⁾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계간 경제전문지 『경제연구』 2003년 4호에 실린 ‘무역 거래에서 실리의 원칙’이라는 글은 무역을 통한 실리확보를 위해 대외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격적인 경제외교를 주문한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연구』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무역에서 실리원칙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실리보장

을 위해 대외시장을 넓혀나가야 하며, 이는 적은 밑천으로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전제”라면서 “무역을 몇 개 나라에 국한시키면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을 능동적·효과적으로 이용해 실리를 보장하려면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즉 무역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역일꾼의 실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시장을 교역 확대의 관건으로 간주하는 인식 수준이나, 무역실무자들의 공격적 자세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경제연구』는 실리구현을 위해 무역거래를 과학적으로 빠짐없이 분석해 타산을 앞세우고 수출품 생산에 새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역을 위한 자금과 자원은 제한된 반면 외화 수요가 급증한 사정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자본가와외의 무역에서는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고 지적해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 습득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 개척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기존 시장의 확

10) 김광일,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요약)”, KOTRA, 2004. 5(<http://www.kotra.or.kr/main/trade/nk/main.jsp>).

11) 이명숙 김일성대 무역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이다. 조선신보, 2002. 11. 13.

대도 노력하여 왔고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중 교역의 규모나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03년 전체 교역의 증가는 북·중 교역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2년 이후 악화된 북·일 관계로 인해 북한의 대일 어패류, 섬유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품목들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¹²⁾

2004년 상반기 중국 엔베 조선자치주와 북한간 교역규모만도 9,254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81.3%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북한 기업들이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엔베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는 2003년 10월부터 1억 위안(약 140억 원)에 달하는 채광설비를 투자, 북한의 무산철광을 합작개발해 2004년 상반기에 철광석 27만 톤을 수입했다. 무역형태도 다양해져 국경무역, 물물교역, 현찰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서비스 무역 등이 병존하고 있다.¹³⁾

이러한 다양한 결제방식의 등장은 부분적으로 무역의 분권화¹⁴⁾ 조치에 따른 산물로

해석된다. 북한은 법제도적으로 분권화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외 교역단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북한은 1998년 9월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 대외무역 주체에 사회협동단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대외무역의 분권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제2장 36조). 분권화 조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주체간 경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무역거래에서 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한 방식으로 상품전시회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상품개발 및 수출과 관련된 해외전시회 참가는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더구나 이러한 움직임은 2002년 10월 2차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확고한 대외교류협력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수출상품 전시와 관련해 중국을 유용한 교역창구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04년 5월에는 북한 대성그룹과 심양시 무역촉진회가 공동으로 양국간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평양시에 '북·중 상품판매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¹⁵⁾

12) 김광일, 앞의 자료.

13) 홍룡강신문, 2004. 9. 6. 연합뉴스(2004. 9. 6)에서 재인용.

14) 분권화란 조직의 중앙으로부터 하부단위로, 그리고 하부단위로부터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하부단위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일을 말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시장으로 가는 길』, 한울아카데미, 2003, 238쪽.

15) 홍룡강신문, 2004. 5. 10.

북한은 2000년 모두 25차례의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상품을 전시했고, 2001년에도 16차례나 참석했다. 북한의 해외전시품목은 의류, 소프트웨어, 우표, 화폐, 관광상품, 인삼, 공예품 등 매우 한정되었으나 중국,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1년 4월 중국 '컴텍스차이나'에서는 지문인식 프로그램 등을, 2001년 9월 일본 'World PC EXPO 2001'에서는 음성인식, 자동번역, 보안 등 9종의 소프트웨어를 전시해 IT분야에서 수출 확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2002년 4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독자적으로 '제1차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독일 뮌헨 국제박람회회사와 공동으로 '평양국제기술·인프라 전시회'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시회는 북한이 서방 전시회 주관사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전시회로 건축자재·장비, 광산장비, 에너지 및 환경분야, 운송·물류, 통신 및 IT, 농업장비, 제조설비, 기계류 분야의 유럽 기업이 대거 참가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미주지역과 러시아 등지의 무역행사에 참가하거나 경제대표단을 파견, 시장개척과 경제외교에 진력했다. 1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 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인삼을 포함한 건강식품과 그림, 수예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월과 2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를 순회하며 민예품, 사진, 도서 등을 전시했다.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지역에서 '북한상품전시회'를 열었다. 11월에는 앙카라, 이스탄불 등 터키 주요 도시를 돌며 미술품 및 수공예품 전시회를 열었고 이에 앞서 4월에는 북한 최대 섬유·의류 무역회사인 조선은하무역총회사가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 수출상담을 했다. 중남미의 경우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사진·토산물 전시회를 열었고, 브라질에서는 5월에 열린 '제11회 국제수공예품 전시회'와 8월 개최된 '제27회 하우스웨어 및 선물용품 박람회'에 각각 참가해 수예, 그림, 도자기 등을 선보였다. 중남미의 주요 시장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무역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특징이다.¹⁶⁾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북한의 해외 전시회 참가 활동은 성과가 의문시되는 소규모, 제3세계 중심의 전시회보다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선진국, 해외 전문전시회 중심으로 참가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6) 연합뉴스, 2004. 1. 27.

17) 임인택, "2001년도 북한의 국제전시활동 동향", 『심층기획조사』, KOTRA, 2002. 3. 18(<http://www.kotra.or.kr/main/trade/nk/main.jsp>).

특히 최근의 특징은 인터넷이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 기업들도 대외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조선부강회사(pugangcorp.com)는 지난 5월 말 도메인을 등록했다. 이 기업은 일종의 그룹(group)으로 부강무역, 부강제약, 부강생물, 부강구슬, 부강주화 등 부문별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 기계, 화학 등의 공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회사적인 조선부강무역회사(pugang-trade.com), 조선부강제약회사(pugangpharma.com) 등도 함께 홈페이지를 열었다. 과거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북한무역 홈페이지(www.dprkorea-trade.com)를 열어 북한 제품을 백화점식으로 소개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개별 회사가 홈페이지를 구축, 사이버 마케팅에 뛰어들 것은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北京)과 단둥(丹東), 상하이(上海), 모스크바, 베를린은 물론 팔라렘푸르, 바르샤바, 쿠바의 아바나, 불가리아의 소피아, 파키스탄의 카라치 등에 지사나 대리인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전승훈 사장은 홈페이지에서 “앞으로도 첨단기술제품을 많이 만들고 세계 각국 회사와

의 거래를 확대해 조국의 부강변영에 기여할 예정”¹⁸⁾이라고 밝히, 북한의 달라진 기업가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과 국제규격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7·1 조치 이후 생산성 제고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적 품질제고를 경제사업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신년공동사설, 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제규격의 품질제고를 통한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 및 대외신용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¹⁹⁾ 대외적으로는 러시아(2002. 2), 독일(2002. 4), 중국(2003. 9) 등과 품질·규격화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가입하는 등 선진기술 도입과 협력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4년에도 베트남과 ‘규격화·계량 및 품질관리부문 협정’을 맺는 등이 분야 발전을 통한 국제시장 접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교역의 다양화와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국제감각을 키우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7·1 조치 이후 외국 상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품질을 중시하고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

18) 연합뉴스, 2004. 9. 7.

19) “제품의 품질제고로 수명을 늘리면 노동력과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신문, 2004. 2. 2.

어났다. 일반 주민들도 상품 디자인이나 품질을 구별하는 감각이 발달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 시내 백화점에는 일본, 중국 등 외국산 상품들이 즐비하며 가격표시 화폐인 유로화는 물론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로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2. 합영·합작

북한은 7·1 조치 이후 외국기업과 합영·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대외경제란 단어가 일부 특수한 단위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7·1 조치 이후) 수입과 지출을 엄밀히 따져가는 경영방식의 일반화는 합영·합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 “경제관리개선은 모든 단위들에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동단추회사의 사례를 소개했다.²¹⁾ 이 회사 로한현 사장은 “경제관리개선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부터 모든 경제부문이 합영·합작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리게 됐다”고 북한 경제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동단추회사는 북한의 ‘조선무관세회사’와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동아연합기업’의 공동투자자로 최근 설립됐다. 2004년 9월부

터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며 연 800만 개의 단추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 제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대동단추회사에 출자한 조선무관세회사는 북한에서 호텔, 식당 등 숙박 및 요식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에 경영 다각화 차원에서 생소한 단추생산회사에 투자했다.

그 이유는 7·1 조치 이전과 같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숙박 및 요식사업의 설비, 장비 등을 수입하려면 외화를 확보해야 한다. 로 사장이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 제 힘으로 본신사업(주력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외화를 벌 수 있다면 새로운 분야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대목은 기업의 자율성과 분권화 영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넓어졌음을 시사한다.

기업 투자의 분권화 및 경영 다각화가 이뤄지고 기업 이윤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공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양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더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의 변화가 국제시장의 접근 노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 일본 월간지 『다이아몬드』 2004년 9월호중 “김정일의 경제”라는 제목의 내용이다. 연합뉴스(2004. 9. 5)에서 재인용.

21) 조선신보, “변혁의 현장에서 - 봉사부문회사가 시작하는 단추생산”, 2004. 8. 11.

또한 북한은 『경제연구』 2004년 2호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적극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제연구』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뒤떨어진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합영·합작사업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사업을 강화하게 되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남아 있는 낡은 기술을 없애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개진(개선)하며,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²²⁾고 밝혔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때 공식적으로는 외자도입이나 관광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으나,²³⁾ 최근에는 북한 내 가장 선도적인 개방지론자로 분류해도 될 만큼 ‘신사고’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노동신문』 2001년 1월 4일자에서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본새(일하는 방식)와 생활기풍을 일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에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

방 현장 방문(2000년 5월, 2001년 1월, 2004년 5월)과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방문(2000년 7월, 2001년 7~8월)에 따른 새로운 지식습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현장연수 경험은 경제특구의 추가 설치와 선진 외자유치 법규의 제정·정비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관광 및 물류중계 등 체제에 대한 과급효과가 비교적 덜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9월부터 3개월간 처음으로 직항로를 이용한 남한 민간인 평양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는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2003년 9월 5명의 조사단을 파견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명소를 둘러보고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을 북한에 제시한 적도 있다. 2001년에는 베를린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물류 및 중계 무역 기능강화와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 노력 등은 물류중계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22) 연합뉴스, 2004. 8. 12.

23) “관광업을 하고 자원이거나 팔아 돈을 벌어 가지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관광업을 하면 돈을 좀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외자를 끌어들이 경제를 부흥시켜 보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것처럼 어려웠던 전후복구 건설시기에도 우리는 관광업이나 외자도입이란 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고 한다.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14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401쪽.

북한의 국제화는 외부 지원의 정도에도 크게 의존한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금융지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북한 재정성의 양창운 부국장은 조총련이 발행하는 『조선』 2004년 1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3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가 부족한 자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외부의 지원이나 차관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이전에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이나 차관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발생한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개발 의혹으로 서방세계로부터 차관과 설비도입 등이 지체되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외부세계로부터의 차관이나 설비도입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²⁴⁾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에 ‘동시·

일괄타결안’ 1단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체제생존, 나아가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강도 높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들을 채택하지 않고는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²⁵⁾ 북한은 국제금융자본의 양면성을 잘 인식하고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²⁶⁾ 그러나 핵문제 등 미국과의 각종 현안의 해결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의 선행 조건인 강도 높은 개혁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감으로 관망하고 있다.²⁷⁾

북한은 최근까지도 국제금융기구 관련 회의에 참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04년 6월 김완수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은행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24) 북한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형남 지배인은 2000~2002년에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신식 설비로 교체키로 하고 유럽의 기업체와 설비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대북압박 정책을 구사하면서 계약자가 이를 지연시켜 결국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2004. 1. 23.

25) Mitchell B. Reiss, "North Korea's Legacy of Missed Opportunities", Remarks to Heritage Foundation, March 12, 2004(<http://www.heritage.org>).

26) 통일부, 『2003 통일백서』, 2003. 2, 55쪽.

27)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통일연구원, 2001, 95쪽.

선진 금융제도를 학습하고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은행관계자의 해외연수 실시 등 선진금융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⁸⁾ 또한 국제금융기관간의 무역결제망인 SWIFT에 가입하고 2001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3. 경제특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외자도입²⁹⁾의 유용한 수단인 경제특구는 북한에게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국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전적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일정 지역을 지정해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부분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지역을 가리킨다. 경제특구는 경제전체의 개방이나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특정지역부터 이를 실시해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³⁰⁾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실험장이면서, 국제화를 통한 국제시장 접근의 유용한 통로이다.

경제특구가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는 국제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통용여부이다.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최소한 외국과 동일한 수준이 되기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이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자유로운 소통, 외국 통화의 자유로운 통용, 환전의 편리함이나 환차 위험 최소화,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입, 자본·노동·토지 시장에서 국제관행의 우선 적용, 자본의 이동과 금융 거래에 있어 정부 규제의 최소화 등이다.³¹⁾

북한은 2002년 7월 가격·임금 및 인센티브 체계 개혁에 이어 9월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그 기본법을 공포함으로써 경제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³²⁾ 특히 신의주 이후 새로운 특구를 잇달아 지정하면서³³⁾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히 수용해 대외개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

28)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6. 25~7. 1), 20쪽 참조.

29) 외자도입방법으로는 차관과 외화채권 발행 등 차입형태에 의한 외자도입,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과 직접적인 국내 사업활동을 허용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 등이 있다.

30) 이창재,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방향”,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121쪽.

31) 최막중,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159~160쪽.

32) 북한은 대외경제관련 법령으로서 가공무역법(2000. 12. 26),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13), 개성공업지구법(2002. 11. 20) 등 4건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대외경제관련 9건의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33) 2004년 1월 남포시를 새로운 행정구역인 ‘특급시’로 개편하는 등 추가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1. 16~19), 13쪽.

다. 북한은 신의주에 이어 금강산(금강산관광지구법, 2002. 10. 13), 개성(개성공업지구법, 2002. 11. 13)을 추가로 특구로 지정하고, 자본주의적 법규를 채택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법제에 있어서는 중국 홍콩행정구의 기본법을 모방하고, 개방방향에 있어서는 심천, 상해 등 중국 경제특구 또는 개방구를 선별 수용하였다. 이로 미뤄볼 때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단둥을 경제건설의 배후지로 하여 국제금융 및 물류중심지로 기능하도록 한 경제특구로 보인다. 이에 비해 금강산 관광지구는 관광특구로서, 개성공업지구는 제조업 중심의 물류공급기지로서 외국기업외에 남한기업의 투자를 겨냥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조치들의 배경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사이에 북한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고, 7·1 조치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와 통한 생산력의 확대가 시급하며, 1991년 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함께 북한 지도부가 개방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감지

된다.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법·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상징인 상업광고가 경제특구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실제 나진·선봉지대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상업용 입간판과 홍보수단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1996년 4월 시행령이 마련됐다.³⁵⁾ 또한 2002년에 채택된 개성공업지구법 제19조는 개발업자는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33호)으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채택(2004. 7. 29)함으로써 총 11개 하위규정 가운데 10개(개발, 기업창설·운영, 노동, 세금, 관리기관 설립·운영, 출입·체류·거주, 세관, 외화관리, 광고, 부동산)를 제정 완료했다. 북한은 이제 회계규정만 채택·발표하면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법규들은 공단내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해 국제금융·유통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개방구로 활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또한 북한은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경제 관련법의

34) 통일부, 『2003 통일백서』, 2003. 2, 55쪽.

35) 나진·선봉지대의 외자유치는 중국, 홍콩, 일본 등으로부터 약 9억 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계약 금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3. 9. 19~25), 11~12쪽.

성격을 갖는 여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른바 ‘남북경협 4대 합의서’³⁶⁾는 개성공업지구법 부칙에 따르면 북한의 법령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활성화하여 조속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국제시장 접근의 통로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Ⅲ.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북한의 국제화 노력 가운데 두드러진 특장은 현장 학습 노력이다. 북한은 2001년 말까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런 외교관계 정상화는 경제대표단의 교류 증가로 이어졌으며, 북한 관료 및 학자들의 해외 경제연수 등 경제교류와 관련된 인적교류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관계 개선과 인적교류의 증가가 교역이나 투자의 실질적 확대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 해외 자본주의 연수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의 관료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방문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들 중 다수는 외국 방문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외국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으며 사기가 저하되었다. 물론 중국 관료들은 중국과 서방공업국의 기술 및 경제격차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보다도 훨씬 뒤쳐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모욕감을 느꼈다.³⁷⁾ 경제난에 대한 당시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보다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낳았듯이 북한의 지도부도 해외 자본주의 연수과정에서 느낀 자각을 통해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 경제대표단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나라들은 물론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개발 경험 등을 시찰했다. 이러한 해외연수는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연평균 500명 이상을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파견해 시장경제, 법제, IT 첨단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 또한 2004년 3~4월 미국의 시라큐스, 샌디에고, 오레곤 주립대 등에 관리와 학자들을 보내 각각 IT, 농업기술 연수 등을 실시했다. 북한 지도부는 이론과 함께 해외연수를 경험한 이

36)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합의서로 2003년 8월 20일 최종적으로 비준·교환되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2003년 7월 24일 비준하였다.

37) Susan L. Shirk저·최완규 옮김,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경남대출판부, 1999, 56쪽.

들을 정책 및 실무 책임자로 등용해 최대한 활용하는 추세다. 박봉주 화학공업상,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³⁸⁾

2002년에는 18명의 북한 경제부서의 최고위 인사로 구성된 경제시찰단(단장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의 18개 지역과 38개 산업시설, 관광지, 유통시설, 연구소 등을 둘러보았다. 북한 경제시찰단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둘러본 뒤 시찰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명시적으로 주요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그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해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경제장관들을 면담했다. 남한과 동남아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다양한 경제발전 모델을 직접 접촉하고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들의 경험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⁹⁾

2003년은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교류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북한은 경제관료 12명의 연수단과 최고인민회의 법률대표단(8월), 5명의 무역사절단(9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11명) 등을 잇달아 파견하였다. 베트

남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쏟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미국과 달리 EU 여러나라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왔다. 2002년 3월에는 리광근 무역상을 비롯해 김춘섭 재정성 부상, 안영길 금속기계공업성 부상, 김광국 채취공업성 부상 등 고위급 12명이 EU의 초청으로 유럽 4개국(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2001년 5월 초 EU 고위대표단(단장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럽경제와 유럽의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직접 관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 대표단의 방문 명칭도 'study tour(economic study visit)'였다.⁴⁰⁾ 구체적으로 북한은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 경제구조 개혁,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와 운용방식에 대한 북한의 학습 의욕은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경제 구조조정 또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에 대한 관심은 향후 북한의 경

38) 통일부, "최근 북한의 변화", 2004. 4. 3쪽.

39) 2002년 11월 1일 통일부 고위 관계자와 필자간의 인터뷰 내용이다.

40) 김삼식, "북한 경제대표단 유럽 순방 중 무엇을 하나", 『심층기획조사』, KOTRA, 2002. 3. 7, 1쪽(<http://www.kotra.or.kr/main/trade/nk/main.jsp>).

제운용방식 변경 여부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4개월 뒤인 2002년 7월에 경제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 내용을 담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EU는 북한 경제대표단 초청 연수에 이어 평양에서 직접 북한의 시장지향경제(market-oriented economy) 문제를 다루는 북한과 EU 사이의 대규모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된 워크숍은 북한 외무성이 주최하고 EU 위원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평양에 주재하는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았다. 워크숍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 현대화 과정, 특히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4개 섹션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경제 현대화에 대한 경험 공유, 경제개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사례, EU 민간분야와 북한간 경제·무역·투자관계 발전방안, 북한의 경제현대화 방안 및 EU와의 협력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⁴¹⁾

EU 전문가들은 동구와 중부 유럽의 시장경제 이행과정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설명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확대

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인 북·EU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북한의 각 정부부처, 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70명이 넘는 관리 및 학자들이 참석해 높은 열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EU 전문가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국제화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측이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상호교류를 환영하며, 양측간 추가 훈련프로그램과 상호방문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⁴²⁾

해외연수와 더불어 식량난에 따른 국제지원단체의 허용도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도지원단체 활동가들은 북한의 206개 군 가운데 163개 군을 방문할 수 있으며, 전체 인구의 86%를 접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방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번 방문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훨씬 용이해졌다. 세계보건기구의 아이즐 소렌슨 평양사무소 대표는 “이전에 비해 문턱이 많

41)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9. 3~9. 9), 8쪽.

42) 기 르두 주한 EU 대표부 부대표 인터뷰 내용임. 연합뉴스, 2004. 9. 6.

이 낮아졌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다”⁴³⁾고 평가한다.

2. 자본주의 교육 시스템의 구축

북한은 자본주의 국제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나 행정관료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는 7·1 조치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경제·과학 부문의 교과내용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는 그동안 사용이 금기시 되었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고, 경영학, 재정학, 금융학 등 경제관리 및 화폐금융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에 착수했다.⁴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연구를 본격화했다. 1990년 처음으로 대학에 자본주의 연구를 위한 무역학과를 개설하고, 1990년대 중반에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총련계 조선대학에 3년간 강의를 의뢰해 처음으로 김일성 대학에서 자본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⁴⁵⁾ 1997년 김일성 대학에 자본주의 경제강좌를 개설하고,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제도연구원을 세웠다.

북한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 양성기관인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서는 7·1 조치 시행을 전후로 기존의 무역경제학과 이외에 국제금융학과 등 국제경제 관련 학과목과 계획정보처리, 자재공급정보처리, 노동행정정보처리, 재정정보처리 등 정보산업과 관련된 학과목을 신설했다.⁴⁶⁾ 또한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컴퓨터센터를 설립하고 실기교육과 모의실습, 컴퓨터 응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12개의 부문별 경제실습실을 갖춘 ‘경제관리실천실기학습실’을 건립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 합영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주목할 만하다. 오랜 폐쇄정책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외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국제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화 교육을 위한 외자유치형 대학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이다.⁴⁷⁾ 2002년 착공해 건설 중인 이 대학은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대학이 완공되면 우선 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인터넷·멀티미디어·정보통신·기계자동화)에 900명, 농

43) Mark Magnier, “N. Korea is more open, U.S. says”, Los Angeles Times, November 21, 2003.

4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3. 11. 28~12. 4), 11~12쪽.

45) 이명숙 김일성대 무역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이다. 조선신보, 2002. 11. 13.

46) 연합뉴스, 2004. 9. 7.

47) 2004년 8월 7일 외자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인 산호세에서 열린 바 있다.

생명공학부(생명·유전·식품·에너지·환경·고분자공학) 400명, 상경학부(국제무역·경영정보·경영경제·회계학·실용영어)에 300명의 학생을 선발해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⁴⁸⁾

또한 북한은 국가간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추세에서 대외사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⁴⁹⁾ 북한은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등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이후 영문판 홈페이지 개설, 영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을 강화해 왔다. 각 직할시·도에 1개교씩 있는 외국어학원에는 학년당 정원을 기존의 60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을 확대했다.

3. 해외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개방적 자력갱생 추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1년 경제개혁 착수에 앞서 내린 강화 문건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

술교류를 확대·발전시켜 합영·합작도 선진 기술을 골라 우리들에게 없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선진과학기술 도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7·1 조치 이후 실리를 강조, 단순한 구호 차원을 벗어나 실리의 구체적 개념과 경제관리개선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북한은 외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기존의 폐쇄적 자력갱생 개념을 개방적으로 재해석하는 사상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제때에 도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⁵²⁾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교류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와 농업 및 과학 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박람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평양 국제 경제기술 및 하부구조 전람회’, ‘제1회 전국

48) 이승율, “북한의 지식산업 복합체 육성을 위한 모형연구”,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졸업논문, 2001. 6. 28.

49) 조선신보, 2003. 7. 13.

50) 김정일 경제개혁 강화문건 요지. 중앙일보, 2004. 6. 28.

5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핵심)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 2001. 10. 22.

52) 민주조선, 2004. 2. 1.

가설 및 착상 발표회(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북한은 특히 2004년에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선진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선진과학기술 도입이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신기술 도입을 2004년 경제부문의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올해 8월까지 북한의 대외과학기술교류는 14개국 20건으로 지난 해 9개국 16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류활동을 대륙별로 보면 중국(컴퓨터, 유리 생산분야) 등 아시아가 6개국 9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6개국 8건, 미주 1개국 2건, 아프리카 1개국 1건 등이다.⁵³⁾

북한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소극적인 기술교류협정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독일(과학기술도서), 스위스(감자), 태국(이동통신분야) 등 유럽·아시아 지역의 선진과학기술 보유국가와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그 중 IT 부문 중심의 대외교류협력활동이 크게 늘었다. 북한은 IT 산업을 단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단변도약론'을 강조하며, 선진 IT 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협력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총 20건의 대외활동 사업 가운데 10건이

IT 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정보산업단지를 2차례 방문(2000년 5월 북경 중관촌, 2001년 1월 상해 포동지구)한 이후 정책적으로 IT 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면서 강화되었다.⁵⁴⁾

또한 북한은 과학기술 부문의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최신정보 수집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한편, 국제규격 및 표준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기술개발과 발명축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과학기술자들의 기술개발 동기부여를 위한 지적제품 유통의 제도화를 위해 기술개발 제공기관과 개인에 상응한 가격 보상을 해주고 있다.⁵⁵⁾

정보와 문화개방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2004년 6월 평양에 개설된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는 북한의 국제화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는 서방의 선진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⁵⁶⁾ 북한은 개설 협상 당시 정보센터 내용물에 전혀

53)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8. 20~9. 2), 15~18쪽.

54) 위의 자료.

55) 통일부, 앞의 자료 참조.

56) 북·독 친선협회와 독일의 민간 문화교류단체인 괴테연구소의 지원으로 설립된 정보센터에는 독일에서 발간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서적 약 4천권, 영화와 음악을 수록한 비디오·CD·카세트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북한과 외국의 신문과 잡지 등이 소장돼 있다. 조선신보, 2004. 8. 21.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협상이 마무리되자 오히려 사서와 연구자들을 위한 훈련센터 건설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은 인터넷 이용을 포함한 현대적 조사기법을 가르치는 10일 과정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⁵⁷⁾ 정보센터의 건설과 북한의 호의적인 태도는 정보 개방과 관련해 실리위주로 바뀐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잘 보여준다. 일부 관계자들만 비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서방 국가의 전문서적을 이제 일반 학생들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⁵⁸⁾

또한 북한은 개방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동통신의 사용도 허용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1월 평양과 나선시에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03년 초 가입자가 3천 명 수준에서 2003년 말 2만 명으로 늘어 1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2년 9월을 전후해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과 서비스 대상 지역이 각 도의 소재지 및 남포, 개성 등 주요 도시

로 확대됐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동전화 사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에는 체신성과 태국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동북아전화통신회사가 전국적인 통신 현대화 업무를 맡고 있다.⁵⁹⁾ 북한은 현재 평양시와 나선시에 유럽형 이동전화 방식인 GSM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식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도시 및 고속도로에 중계기지 건설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2007년까지 이동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외부세계와 연결시킬 계획은 갖고 있으나, 국내외 정치적 환경의 제약으로 아직까지 외부 인터넷활용은 제한적이다.⁶⁰⁾ 국제 인터넷과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갖춰지고, 광대역시스템(차단기술)을 개발한 이후 접속시킬 계획이다. 2004년 1월 평양에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투자가가 2월 중순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개통이 수차례 연기되어 서비스의 제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57) Norimitsu Onishi, "North Korea is reaching out, and World is reaching back", New York Times, August 20, 2004.

58) 인터넷 사이트 NKZONE과 독일 저널리스트 Henrik Bork간 대담내용. "Henrik Bork on German Library & Change in North Korea", June 9, 2004(<http://www.nkzone.org/nkzone/entry/2004/06/index.php>).

59) 중국 국제라디오방송국 보도 내용임. KOTRA, "북한, 휴대폰 가입자수 2만 여명으로 급증", 『북한경제속보』, 2003. 12. 19(http://www.kotra.or.kr/main/trade/nk/nk_news.jsp).

60) 북한은 2002년 11월 북한 전역에 시·군까지 인트라넷(폐쇄적 인터넷)을 구축해 공장·기업소간 생산기술과 정보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학원에서 공장·기업소에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트라넷에 연결시킨 것이다.

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적 인터넷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IT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 경영, 기술습득 활동 등에서 정보화를 통한 실리보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¹⁾ 또한 북한은 공장·기업소들이 외국의 선진 생산 및 경영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해킹방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 ‘능라방화벽’ 등의 개발도 외부인터넷과의 연결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개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⁶²⁾

IV.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1. 국제화의 양면성: 도전과 기회

경제개방 혹은 국제화는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은 이제 4개의 경제 특구를 갖게 됐고, 외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는 불가피하게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고, 이

에 따라 기존의 사회주의적 집단 소유와 자본주의적 개인소유의 병존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주의적 경제관리형태와 함께 자본주의적 경제관리형태가 병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앞으로 이러한 병존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계를 하는지가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유 및 경제관리에서 집단관리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대외개방은 체제전환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외개방의 진전은 국제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국내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도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성공사례는 북한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국제경제기구 참여, 무역의 자유화·분권화 등을 통한 무역구조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⁶³⁾ 이는 곧 중국의 국제화

61) 2004년 9월 19일 북한 무역성 부상의 발언내용임.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4. 23~4. 29), 18쪽.

62) 북한의 조선체신회사 황철풍 사장은 2003년 2월 1일 “국제인터넷은 현실적 과제로 부상… 차단기술 부문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룩된 다음의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2004. 4. 30~5. 6), 16쪽.

63) 박영호 외, 『통일예측모형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추세 분석』, 통일연구원, 2004, 26~27쪽.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북한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국제화로부터 격리된 것처럼 보였으나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거의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질서는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일원화되었다. 심지어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도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의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일국 사회주의체제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⁶⁴⁾ 더구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넷, 이동통신 등의 급격한 발달은 물리적으로 고전적인 폐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북한도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전향적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 IT 분야의 성장과 북한내 이동통신 사용자 증가 현상 등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선진기술 도입과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현실도 북한 지도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식의 국제화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제화는 인식 수준에서 그치거나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내부 역량

축적과 함께 외부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외부의 경제지원이 북한의 취약한 내부 역량을 보완하면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998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2002년 이후 3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1997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연 3억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교역과 인도적 지원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은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남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최근 북한 경제의 점진적 회복은 내부적 요소가 아닌 외부 경제적 자원의 투입증가에 기인한 것이다.⁶⁵⁾

또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경제특구의 성공은 외국인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다. 북한의 개방지향적인 특구개발전략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실제 투자 결정이나 이행은 매우 신중한 편이다. 외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투자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외에 인프라 여건의 완비 등도 투자의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심천이 정부와

64) 윤덕민, “세계화”, 『통일경제』 통권 제61호, 현대경제연구원, 2001. 1, 13~14쪽.

65) 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심포지움 발표논문집(2004. 7), 21~23쪽.

국내 금융기관 자금을 적극 투입하여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도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천 개발 초기(1980~85년)에는 기본건설투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26%, 국내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35%인 반면, 외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였다. 경제특구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990년대 들어 경제특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환경이 갖춰지면서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⁶⁶⁾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부자본 축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 같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서방기업의 대부분은 당분간 북한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최근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관계, 나아가 미국과의 협력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첨단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한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국방비를 포함한 각종 통계의 투명성 보장, 경제평가단의 조사 허용, 채무이행 스케줄의 제시, 확실한 개방의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⁶⁷⁾ 즉 강도 높은 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셈이다.

나진·선봉지대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실험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개성공단 건설로 과급되는 흐름은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급진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⁸⁾ 또한 북한은 그간 부분적인 무역분권화 및 무역기구 정비와 2002년 7월의 북한화폐 평가절하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외자유치는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성 경제협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고 북한 경제의 공급능력 한계와 국제시장 진입의 어려움, 국내 투자구조의 왜곡 등으로 비교우위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무역확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⁶⁹⁾

66) 홍익표,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63쪽.

67)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통일연구원, 2001, 99쪽.

68) 배종렬, 앞의 글, 28~29쪽.

69) 오승렬, “북한경제 발전과 남북경협: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발표논문집(2004. 7), 101쪽.

아직까지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상품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가별, 상품별로 수출다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내 수입수요의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⁷⁰⁾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91백만 달러로 199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에서는 77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61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837백만 달러로 전년의 790백만 달러에 비해 악화되어 수입 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를 보여주었다.⁷¹⁾ 북한의 대외무역제도나 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통한 외환확보와 기술도입 및 비교우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생산단위의 무역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국제화의 심화는 북한에게 도전과 기회의 제공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다행히 북한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화의 거센 물결 앞에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국제시장 접

근 노력 등을 통해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개방의 성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미국의 부시 신보수주의 정권의 고립봉쇄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동적 대응전략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조건에 달려있다. 즉 남북분단의 해소문제, 동북아질서 재편의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군사적 문제 등이 걸려 있다.⁷²⁾ 이러한 조건하에서 북한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나 북한은 근본적으로 체제생존과 직결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난제 앞에서 제한적 개방에 따른 제한된 효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직면한 제약은 한국의 향후 정치·경제적 진로와도 무관치 않다. 즉 북한의 성공적인 국제화 이행 여부는 비단 그 효과가 북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재도약의 동인을 상당부분 상실한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남북한은 물론 어느 나

70) 통일부, 『2003 통일백서』, 2003. 2, 55쪽.

71) 김광일, 앞의 자료.

72) 배종렬, 앞의 글, 28~29쪽.

라도 중단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이 국제화의 조류에서 격리된 상황에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결국 분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일, 즉 북한을 국제화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 과정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한국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상당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⁷³⁾ 다행히 북한도 명시적으로 남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력의 가능성과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⁷⁴⁾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핵 비확산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국제화 지원에 적지 않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접근과 공통되나, 대북 화해와 통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접근 방법이 본질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화와 관련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이 당장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국제화나 국제시장 접근과 관련한 새로운 대북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EU나 국제구호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화 지원 및 개발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방적인 대북접근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세계화 혹은 국제화 지원은 미국 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정책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경협을 추진이나 북한의 국제화 지원에 있어 국제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제화 지원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축진을 장려하려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영역이 많아 지원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NGO 지원을 통한 북한 국제화 촉진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국내외 NGO와 공동으로,

73) 윤덕민, 앞의 글, 15쪽.

74)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 30) 합의에 따라 북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시찰단 18명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연구소, 유통시설, 관광지 등을 시찰한 뒤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남북경협 확대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대목은 북한지도부의 진의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또는 NGO 독자적으로 실천하는데 측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U 등 상당수 나라가 이미 북한과 공동으로 초보적 단계이나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북한의 빈곤탈출을 위한 경제개발 경험 등을 전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북한에 대해 국제 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아닌 비 금융지원, 즉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자본동원능력 제고, 내부자원의 효율적 이용, 해외직접투자의 유인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⁷⁵⁾ 나아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민간 NGO의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

75) 김성철, 앞의 책, 99쪽.

〈참고문헌〉

- 김광일,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요약)”, KOTRA, 2004. 5(<http://www.kotra.or.kr>).
- 김삼식, “북한 경제대표단 유럽 순방 중 무엇을 하나”, 『심층기획조사』, KOTRA, 2002. 3. 7(<http://www.kotra.or.kr>).
-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통일연구원, 2001.
-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14』, 조선로동당 출판사, 평양, 2000.
- 남덕우 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영호 외, 『통일예측모형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추세 분석』, 통일연구원, 2004.
- 박형중,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통일연구원, 2001.
- Susan L. Shirk 저·최완규 옮김,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경남대출판부, 1999.
- 이승율, “북한의 지식산업 복합체 육성을 위한 모형연구”,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졸업논문, 2001. 6. 28.
- 임을출, “북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 예측 연구”, 통일부 신진학자 논문, 2004. 10.
-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 임인택, “2001년도 북한의 국제전시활동 동향”, 『심층기획조사』, KOTRA, 2002. 3. 18(<http://www.kotra.or.kr>).
- 윤덕민, “세계화”, 『통일경제』 통권 제61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1.
- 조지프 스티글리츠, 『시장으로 가는 길』, 한울아카데미,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각호.
- _____, 『주간북한동향』, 각호.
-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004. 7).
- 한호석, “북(조선) 경제의 이해를 위하여”, 『북한정세 보고서』, 미주평화통일연구소, 뉴욕, 1995. 11.
- 홍익표,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 Mark Magnier, “N. Korea is more open, U.S. says”, Los Angeles Times, November 21, 2003.
- NKZONE, “Henrik Bork on German Library & Change in North Korea”, June 9, 2004(<http://www.nkzone.org>).
- Norimitsu Onishi, “North Korea is reaching out, and World is reaching back,” New York Times, August 20, 2004.
- Wing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8, 1994.